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 13 통권 1501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미래 경영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박윤종 회계사 :

연말결산시점의 재무제표에 손익계상반영하는 임직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채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도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해야 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중소기업 · 중견중소 자영업자의 연말재무제표 작성시 자산 · 부채 평가와 대응 세무조정 >

개념, 구분	자산 등 평가방법, 원칙 (중소기업 회계기준)	세무상 평가와 세무조정(법인세법)
자산평가기준	취득원가인식 원칙(제36조제1항)	평가전 가액(즉 원가주의임 : 법 제42조) 평가손실 손금불산입(법 제22조)
예금, 적금의 평가	불입원가+기간이자인식 : 미수 수익의 손익 반영	기간이자 계상 익금반영(시행령 제70조)
유가증권의 평가	취득원가 반영 후 시가평가원칙(평가손익인식 제39조)	평가익은 익금불산입(법 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	평가증은 안되고, 평가손은 반영(제37조)	평가손은 손금산입(법 제42조) 재고평가익은 익금산입(제18조제1호 단서)
매출채권의 평가	취득거래금액대로 반영, 대손충당금 설정(제40조)	회수불능 대손금 손금산입(제19조의2) 대손충당금 1% 손금산입(시행령 제61조)
유무형자산 평가	취득원가 반영, 감가상각비 반영(제38조)	규정된 상각비용 손금산입(제23조)
매입채무평가	최초부담액으로 반영, 만기와 차이금액은 이자비용 반영(제41조)	현재가치평가손익은 익금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 후 최종 거래시 손 · 익금반영(제18조, 제22조)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 세 회 계 법 인 재 경 저 널

통권 1501 호 / 주간 2호

2021. 1. 13.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과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소기업·중견중소 자영업자의 연말재무제표 작성시 자산·부채 평가와 대응 세무조정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연말결산시점의 재무제표에 손익계상반영하는 임직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2
C E O 에 세 이	미래 경영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누적결손인 해외자회사의 채권 자본금 전환 - 주주 배당시 배당조건 문의입니다 - 관부가세 인도조건 및 결제방법에 따른 부가세 불공제 구분 - 용역의 성격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양도소득세 상황별 세율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9 10
직 장 인 Survival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새해계획을 만드는 방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1691, 2020.04.20)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인-1496, 2020.05.26)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 세무서 창구 운영 안 한다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도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해야 함	13
세 무 정 보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연말결산시점의 재무제표에 손익계상반영하는 임직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항목구분	지급방법, 내역, 계산과정	손금	근거조문 등
직원급여	결산에 계상(손익반영), 순자산감소로 손금산입됨	산입	법인세법 제19조
임원급여	결산에 계상(손익반영), 순자산감소로 손금산입됨	산입	
임직원 상여금	연보수, 연봉 등 급여지급기준범위의 상여금(근로대 가), 손금산입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전단
지급기준초과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급여지급기준(업 계평균 등) 초과액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후단
이익처분적 성과 상여금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급여지 급기준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결산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	불산입	국세청 서면 2018- 2639(2020.1.8)
임직원 주식매수 선택권	상법, 금융회사법이나 해외모법인 부여 주식매수선 택권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제19의2조
과다인건비	지배주주 인건비 중 동일직급 임원보다 높은 금액	불산입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3조 제3항)
잉여금 처분적 손 비	결산에 상여금 비용 반영했다라도, 1년간 결산이익 의 처분성격이면 손익반영해도 손금불산입	불산입	법인세법 제20조
합명 · 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 지급보수, 급여처리해도 손금불산입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이익배당금	결산 종료 후 이익배당금 중 주주나 주주 아닌 임직 원 차등분배 · 지급액 : 손금불산입	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미래 경영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운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21세기는 이른바 정보경제(the economics of information)의 혁명시대다. 디지털혁명의 시대다. 이제 세계는 단일망으로 연결되고 공통된 통신표준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종류의 정보가 공개되고 교류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의 거리를 확보하다보면 공간과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다. 공간과 시간이 순식간에 극복된다. 뿐만 아니다. 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세계 주가지수가 곧 탄생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급류를 타면서 공간 경영(Space-Based Management), 시간경영(Time-Based Management)과 정보경영(Information-Based Management)은 미래경영의 징표가 되었다. 일테면 가장 싼 곳에서 제조하여 비싼 곳에서 팔아야 하는 공간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상황과 여건 변화 속에서 긴박한 선택과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는 스피드 경영, 시간경영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홍수처럼 범람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가공하며 그것을 활용할 줄 하는 정보경영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미래경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섯가지 기본적인 경영의 덕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경영의 투명성이 보다 철저히 강화되어야 한다. IMF이후 99년말 "한국기업의 투명성이 더 나빠졌다."는 홍콩의 정치, 경제 위험도 평가기관인 PERC의 보고가 있었다. IMD 자료에 의하면 금융산업 대외 신인도 순위도 98년 45위, 99년 41위로 중국, 인도, 태국보다도 하위에 있다. 한국기업들이 내놓는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믿지 못한다는 외국의 투자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상존하고 있다. 정직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신뢰가 쌓인 후 시장경제는 작동되는 법이다.

둘째, 기업은 그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번영해야 한다. 국가와 기업의 경계가 유동적

이고 보다 개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다. 그 가운데서 "나의 이익"만 챙기며 공존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나만을 생각하고 팔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반발과 충돌뿐이다.

셋째, 경영의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제 특정의 기업을 위해 국가가 보호막을 쳐주거나 외국의 경쟁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기업의 모든 자원이 최상의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경영되어 최고의 효율로 세계 제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너의 아집과 노욕 그리고 아파추어 같은 오너 2세의 취향으로 비효율적 사업을 자행해서는 안된다.

넷째, 이제 막 시작된 디지털혁명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서야 한다. 디지털 리더업체가 주도하는 산업의 재편 속에서 새로운 거래형태가 생겨나고 소비행태도 변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원투원 마케팅(One to One Marketing)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부응한 고성장 상품의 개발이 긴요하다.

다섯째, R&D(Research & Development)뿐만 아니라 D&D(Design & Development)가 강화되어야 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태양전지와 1mm 이하의 로봇의 개발처럼 R&D는 경영에 있어 영원히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디자인 개발, D&D가 더욱 중요하다.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비롯한 각종 패션에서 창조적 문화가치를 생산하는 D&D가 바로 글로벌 기본덕목이다.

여섯째, 인간중심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더 인간의 창의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31일 (목)	1월 4일 (월)	1월 5일 (화)	1월 6일 (수)	1월 7일 (목)
미	달	러 (USD)	1088.00	1088.00	1083.10	1086.10	1086.80
일	본	엔 (JPY)	1054.26	1053.80	1050.08	1057.49	1054.48
캐	나	다 달 러 (CAD)	853.30	855.01	846.97	856.95	857.37
홍	콩	달 러 (HKD)	140.35	140.33	139.69	140.09	140.18
위	안	화 (CNH)	166.96	166.96	167.55	168.70	168.86
유	로	화 (EUR)	1338.24	1331.39	1326.58	1335.52	1339.97
호	주	달 러 (AUD)	836.56	838.09	830.14	842.22	848.57
싱	가	폴 달 러 (SGD)	822.22	823.12	820.37	824.05	824.5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69.51	270.48	270.34	270.38	270.99

누적결손인 해외자회사의 채권 자본금 전환

Q 당사의 누적결손인 자회사의 채권 약 10억원을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대여금이 아닌 미상환한 채권도 출자 전환이 가능한 지
2. 100% 지분 가진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채무면제액 어떻게 계산하는 지
(자회사의 누적 결손액 100억, 출자 전환 예정 채권 10억)
3. 자회사의 누적 결손으로 인한 채무출자전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A

1.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합니다.
2. 자회사 입장에서 해당 채권액만큼 주식발행하여 자본금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3. 채권의 주식전환시 시가로 반영해야 하며, 당연히 시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주 배당시 배당조건 문의입니다

Q

1. 주주배당시, 미처분결손금이 있을때 배당이 되는지요?
2. 주주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을때는 배당조건이 되는지요

A 배당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규정된 배다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관부가세 인도조건 및 결제방법에 따른 부가세 불공제 구분

- Q**
1. 수입시 인도조건이 DDP 일 때 수출자가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수출자가 부가세를 대납하여 수입자가 세금계산서만 받고 부가세에 대해 세관이나 수출자에게 전혀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불공제인가요?
 2. 인도조건이 FOB 이고 결제방법이 GN으로 무상거래인데, 수출자가 통관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때의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1. 수입시 수출자가 부가가치세 부담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더라도 자기가 부담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1670, 2006.08.02

-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세관통관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
- 당사는 해외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채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 법인A사에 채권 회수 및 수금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와 국내 법인A사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 아니면 일반 용역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가요?

- A**
- 채권회수 및 수금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사업장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지점사업장 등이 폐쇄되기도 하면서 사업장간 재고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사용 및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해 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장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때란 폐업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도 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는 경

우, ② 동일 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자가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는 경우, ④ 미착재화, ⑤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장 통폐합 및 지점폐업을 하는 경우 지점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지점의 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본점으로 이동된 뒤 판매·출고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종전 지점의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본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부가 46015-407, 2001. 2. 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양도소득세 상황별 세율

구분		현행		2021년 6월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40%	조정지역 : 50% 그 외 : 기본세율	7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 3주택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억~6억원 이하	0.7%	0.8%		0.9%	1.6%	
6억~12억원 이하	1%	1.2%		1.3%	2.2%	
12억~50억원 이하	1.4%	1.6%		1.8%	3.6%	
50억~94억원 이하	2%	2.2%		2.5%	5%	
94억원 초과	2.7%	3%		3.2%	6%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일시적 2주택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요건	새 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또는 새 집 완공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단, 새 집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이사 해 1년 이상 실거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과세 대상 아님	내년부터 25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87개	내년부터 세차장,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중고 가구점 등 8개 업종 추가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사업장의 월급여 21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장 규모 요건 폐지, 텔레마케터, 여가 서 비스업 등도 야간수당 비과세 가능
영수증 필요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1만원 이하	3만원 이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고지서 신청 세액공제 혜택	없음	고지서 한 건당 1000원
공무원 포상금	비과세	연 240만원 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변동 추이

시기	적용 개소세율	인하 폭
2018년 7월 ~ 2019년 12월	3.5%	30%
2020년 3~6월	1.5%	70%
2020년 7월~12월	3.5%	30%
2021년~	3.5%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30%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새해계획을 만드는 방법

우선 순위 정의

새해에 당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를 나열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결혼, 자녀, 가족, 건강 등이 당신의 삶에 어디에 적합습니까? 3-5 가지 우선 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계절은 일년 내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정 작성

연간 달력을 보십시오. 어떤 필수 약속이 있습니까? 계획해야 할 중요한 휴일, 생일 및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주요 이벤트를 먼저 기록해보면 올해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와 목표가 현실적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프로젝트 목록

이 단계는 달성하려는 "큰"일을 파악한 다음 목표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의 모든 꿈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 실제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이유와 테마 찾기

우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완료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유"를 파악할 때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 만들기

시간과 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정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 할 시간을 명확히 정합니다. 나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집안일 및 업무 등의 할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집중하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목표가 너무 대담하면 진척이 부족하여 좌절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작으면 "작업을 완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미루게 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 또는 분기 별 점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1691, 2020.04.20

질 의

-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해외자회사에 임가공설비 처분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133, 2020.05.21

질 의

- 신청인은 2016.5월 부친으로부터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이 중 '갑'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음
- '을'법인은 ◇◇류를 생산하여 전량을 '갑'법인에 납품하고 '갑'법인은 판매·유통시키는 관계임('갑'법인은 판매를 담당하고, '을'법인은 생산

을 담당하는 구조임)

- '을'법인(합병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갑'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음
 - '갑'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을'법인이 그대로 흡수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업장 이동은 없음
 - 합병 이후에도 최대주주는 신청인으로 동일함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 18⑥(1)라1)·마1)에 따른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 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도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해야 함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인-1496, 2020.05.26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 ERP시스템과 그룹웨어(회사 소프트웨어)를 연동하여 ERP에서 전표·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전표와 증빙을 PDF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회사 서버에 5년이상 보관함
- PDF등의 파일로 변환되어 회사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의 실물(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명의 개인 신용 카드 매출전표로 제출된 지출증빙 포함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부가-1773, 2020.06.10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 －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음(이하 "본건 용역")
- 본건 용역의 주요내용은 주식시장의 각 시간대별 특정 시점에 매수세력이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월 00,000원이며 질의법인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HTS)을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식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 세무서 창구 운영 안 한다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7만7000명)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 기한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카드썸썸이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상향

정부가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썸썸이를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초과한 분의 10%만큼 추

가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월세를 내리기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

세액공제율 7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율의 폭이 커서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고소득 임대인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부가율 15~40%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30%에서 15%~40%로 상향조정됐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30%로 완화됐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1. 1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음
 -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음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4,800 → 8,000만원 미만) 등
 -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 → 연840시간) 등
 -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 → 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 → 1,078개 질환) 등
 -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기존 2.4GHz, 5GHz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GHz 대역으로 확대
 -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등
 - * '17년 최저임금의 40%('20년) → 45%('21년) → 50%('22년)
 -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알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 농가부담30%) → 8만원(국비70%, 농가부담30%)
 -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에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 12월 28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함
 -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함.

참 고

시기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월)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 (2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가기 지원,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 (4월)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철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 (5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 (6월)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기획재정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율 : 모든기업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공제율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



였습니다.

*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연 령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법인) 3.0%, 6.0%

• 세 부담 상한 인상

－ 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 부담 상한 폐지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 (%)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 세율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①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형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 추진배경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 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 또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 (예)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
- 주요내용 :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였습니다.

-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가 허용됩니다.

* 「주세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기존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현행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확대대상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음식점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조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 (현행)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소득세 과세
-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

■ (개정)

유 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식
수익자 과세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 과세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소득원천별 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1단계: 신탁재산 2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위탁자가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2단계 과세 1)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既납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 주요내용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20.6.30. 취득한 다음의 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용 되는 경우 한정)

②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20.6.30. 취득분)

■ 개정 : 적용기한 한시 적용('21.1.1.~'21.12.31. 취득분)

- 추진배경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주요내용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21년 취득분)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요건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 기업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적용기한 : '21.1.1~'22.12.31.까지 출자 등 취득분

- 추진배경 :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
- 주요내용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등 취득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재설계

-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65%→70%)
- 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 확대 (총급여 7,000만원→8,000만원)
- 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1년→2년)

■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22.12.31.

■ 적용시기

- (기업소득·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 추진배경 :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기업소득 비중 조정,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 주요내용 :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하였습니다.

* 법인의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산출세액이 없거나, 국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 주요내용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구분	현행	'21 ~ '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금액 1억 원, 14% 세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주요내용 :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금액 2억 원, 9% 세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 원 ×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됩니다.

- 추진배경 :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 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



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
(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보호절차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현행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개선하였습니다.

-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 주요내용 :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되어,

-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 →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추가

■ 동 개정으로,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 시 구매자가 제공하는(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수출기업 등 지원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 허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제도는 유효기간(3년) 경과시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예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만 가중될 가능성
- 주요내용 :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저율관세(3%)를 부과합니다.

■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



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입니다.

-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1년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3%)를 부과하도록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가 작동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유량조절기 : 관세 3%
 - 전기식의 유량조절기 : 관세 8%
 - 주요내용 :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3%)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국세청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종전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주무관청 → (지정) 기획재정부
 - 개정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국 세 청 → (지정) 기획재정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추진배경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추진배경 :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 시행일 : 2021년 2월 예정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홀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홀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홀벌이 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 주요내용 : (홀벌이 가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
 -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 I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II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청년특례: 120% ↓)	3억원 이하(청년특례 별도규정)	X
Ⅱ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별도 정함)	X	X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 → 경사노췌 합의('18.8,'19.3) → 「국민취업지원 제도 추진방안」 일자리췌 의결('19.6)

○ 근거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주요내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

구분		근로자	예술인
1.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단,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 신청 으로 5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등	(좌동)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
수급요건	기여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 간 9개월 이상
	주요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 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 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 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우선지 원:90일, 대규모:30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
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
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2020년	2021년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1,078,000원(부담기초액)	월 1,094,000원(부담기초액)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142,680원	월 1,159,64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293,600원	월 1,312,8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509,200원	월 1,531,6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최저임금액)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주요내용 :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제도 적용 : 2020년~(계속)
 - 신고·납부 : 2021년~(계속)
- 시행일 : (부담금 적용)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



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text{원} \times 208.57\text{시간} \times 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text{원} \times 208.57\text{시간} \times 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추진배경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 ② 연 1.5%
-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종류	의료·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한도	1,000만원	1,250만원	1,000만원 (1부모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	1,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2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임금 범위

*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주요내용

- (용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용자 지원
- (용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

(용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용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 주요내용

-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현재 보험설계사, 고객센터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



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 · 시행되며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 · 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 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시행일 : 2021년 2월 1일